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II)

2021. 6. 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주요 과제(요약)	2
III . 추진과제	3
1. 기업부담 완화 과제	3
2. 미래대비 지원 과제	10
IV . 향후 추진계획	15
[참고1]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I. 추진 배경

□ 경제반등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과 더불어 기업의 역할 중요

- 과감한 정책대응 등으로 '20년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 ($\Delta 1.0\%$, G20 국가중 3위) 하는 등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나
 - 현재의 견고한 회복세를 지속하여 **금년 4% 수준 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
- 특히, 기업의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상황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 대응을 지원하여 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필요

☞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 대응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긴밀한 기업 소통을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마련

- 경제단체장 간담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수렴

* 경제부총리(4.16), 정책실장(4.7~4.14)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

** 중앙정부(기재부, 중기부)·지자체·민간(대한상의)로 구성·운영('21.1.22~)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개요 >

□ 규제 테마별로 명확한 역할분담 + 협업과제는 공동작업

- ① (혁신) 스타트업, 혁신기업 규제·애로 해소 → 혁신성장 옴부즈만
- ② (中企) 중소기업, 중견기업 규제·애로 해소 → 중소기업 옴부즈만
- ③ (지역) 지자체, 지역특구 규제·애로 해소 → 시도지사협의회

-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중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氣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선별하여 검토
- 코로나 19에 따라 가중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 **19건**, 기업환경 급변 속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 **10건** 추진

II. 주요 과제(요약)

□ 기업활동·국민생활 등과 밀접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과제 19건을 해결

① 코로나 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제도 보완* 및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 ¹⁾3개월내 단기출장 → 1년이상 장기출장으로 확대, ²⁾60일전 사전신청 요건 완화

** 계좌자동이체에 한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중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에도 보험료 경감

②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완화 등 기업 경영 효율화 추진

③ 조합추천 수의금액한도 상향(0.5→1억원),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업력 기준 45→30년 등)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래대비 지원과제 10건 추진

① 탄소중립 이행 지원 및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마련

*(R&D 비용공제)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

(시설투자공제) 최대공제율 10%(대기업)~20%(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추가공제분 포함시)

②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지침 제정,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일산화탄소·매연측정기 등 검사장비·기구 제외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등 추진

* 현재, '곤돌라형 달비계' 위주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III. 추진과제

1 기업부담 완화

◇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인 출국 애로 해소 · 외국인 인력수급 원활화와 중소기업의 비용 · 행정부담 완화 추진

1. 코로나19 부담 경감

①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 (기존)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국외 출국 시* 백신접종 우선순위 적용
* 공무상 국외출장 등 국외로 직결되는 업무 및 중요한 경제활동 수행(사회적 파급력 등 고려)
 - 단기 국외방문(3개월이내)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및 신청-심사-접종 완료까지 2회 접종 고려하여 약 2개월 소요
- (개선) 장기 출장 기업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①대상 확대 및 ②출국 60일 이전 신청 요건 완화
 - ① (대상확대) 장기 파견자와 동반가족(주재관 등 12개월 이상 해외거주자) 대상 백신 우선 순위 추가부여(5.10일~)
 - ② (기간단축) 접종백신 종류 변경(AZ → 얀센)에 따른 소요 기간 단축(2개월 → 1개월) 검토
- (효과) 불가피 · 긴급한 출국애로 해소 통해 글로벌 경쟁력 유지

②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 (기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검사키트 도입 요구가 증가하나,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
- (개선) 자가검사키트의 신속 도입 지원(개발지원*, 신속허가)
 - * 허가신청 전 전담심사자의 검토자문 등을 통해 개발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 조건부 허가*되어 시판 중이며, 정식허가로 전환 위한 임상시험 등 허가지원 중
 - * 허가 후 3개월 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 조건
- (효과)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③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 (기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계적 시행 예정('22~*)이나 해외출장 및 현지법인 지원 제약 등으로 기한내 구축이 곤란
 - * ('22년) 자산 2조원 이상 → ('23년) 자산 5천억 이상 → ('24년~) 상장사 전체
 -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93%(152/163사)가 해외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상황
- (개선)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유예기간 부여(1년) 검토
 - * 상반기중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1년의 유예기간 부여
- (효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 경감

④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 (기존) 내국인 취업 기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의 구인난 심화 및 수익성 악화
- (개선)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포함 검토
 - *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중. '허용제외 분야' 결정기준 마련('20년) → 노사정 논의('21년) → 네거티브 방식 단계적 적용('22년~)
- (효과)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비용 절감

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 (기존) 고용·산재보험은 계좌자동이체에 한해 보험료 경감중*
 - * 국민연금만 계좌자동이체 및 신용카드자동이체에도 보험료 경감중
- (개선)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보험료 경감
 -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21.7월)
- (효과) 보험료 비용 절감 및 보험료간 형평성 확보

2. 기업 경영 효율화

①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 (기존)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인 호봉제에서는 직무 난이도, 업무량 등이 증가하지 않아도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
 - 성장을 둔화,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움
- (개선) 현행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성과중심 임금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편 및 민간 확산
 - ① (공공) '20년 경사노위 합의*' 및 경영평가 반영**을 계기로 3대 원칙에 따른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
 - * '20.11월 경사노위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정책방향과 ①기관특성을 반영하여, ②노사합의·자율로, ③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합의
 - ** 직무급 도입준비 및 수준 지표를 신설(20.9월) → 현재 경영평가 진행중(~21.6월)
 - ② (민간)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중심 임금체제로의 전환 지원
 - *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20년, 고용부): 기존임금 체계 변화 필요성 및 합리화 방향·절차와 주요 우수 사례 등 제시
- (효과)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에 따른 기업·국가 경쟁력 제고

②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 (기존) 코스피 상장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총수의 20%를 의무 배정하는 등 수요와 무관히 운영
 -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①
- (개선)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사유 추가* 등 제도 유연화
 - *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6.20일 시행)
- (효과) 조합의 실수요를 반영한 우리사주 배정

③ 反기업 정서 완화

- (기존) 反기업정서는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을 실현하는 기업의 긍정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을 훼손
- (개선)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통해 경제교육 활성화 노력 경주
 - * 경제4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포함, 법인화 승인('19.12)
 - ① 민간단체·기업 등 협력사업을 통한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 ② 경제단체간 경제교육 콘텐츠 공유 활성화 등 추진('21년 80백만원 지원)
- (효과) 反기업정서 해소 통한 기업활력 제고

3. 중소기업 부담 경감

①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 (기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연평균 선정기업이 5개사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약화된다는 지적 제기

*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체 수 : ('17) 6개사, ('18) 4개사, ('19) 4개사, ('20) 5개사
→ 업종, 업력, R&D 비중 등이 법상 요건(사업개시 45년 이상 주된 업종 유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개선) 국회논의 등 감안하여 업력¹⁾, 업종제한요건²⁾ 등 완화 추진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박수영 의원안, '20.7월)이 국회 계류중

1) (현행) 45년 이상 → (개정) 30년 이상

2) (현행) 부동산업,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선정 제한

(개정) 부동산업 포함(최근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등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 중인점 감안)

- (효과) 모범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기대

②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 (기존) 기존 한-베 FTA 下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재단·봉제공정을 모두 거친 의류에 대해서만 베트남產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 적용

- 하지만 동 기준에 따르면 최신 공정(재단·봉제공정 不要)으로 제작된 의류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기준 불충족

- (개선) 의류 원산지기준에서 재단·봉제공정 요건을 삭제*(21.下)

* 한-베 통상당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한-베 FTA 공동위(21.下) 계기 양해각서 서명 예정

* (기존) 2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
→ (개선)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

- (효과) 국내 의류업계 원자재 공급여건 개선 및 생산비 절감

③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개선

- (기존) 일반적인 계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용 시 실제 거래규모에 비해 과다 산정
 - *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경우, 수년의 계약기간 중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결정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 (개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추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7.6 시행예정)
 - * (다수공급자 계약) 총 계약금액(통상 3년) → 연 평균 계약금액으로 개선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총 계약금액 기준 산정
- (효과) 계약금액 대비 위반금액에 대한 조달기업의 과도한 부담 완화

④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 (기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보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운영 중(~'21.6)

<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

- ▶ (개념)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체결
-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 (한도) 국가계약법 소액수의계약 한도와 동일 (소기업·소상공인: 0.5억원)
 - ※ 현재 코로나 대응 한시특례('20.5~'21.6)로 동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운영 중

- (개선)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0.5 → 1억원) 제도화(7월~)
- (효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보 지원

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 (기존)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 필요시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중(상생협력법)이나
 - * (직접) 수탁기업 → 위탁기업 / (간접) 수탁기업 → 중기협동조합 → 위탁기업
-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성 부족
- (개선) 납품대금 조정신청 협의주체에 “중기중앙회” 추가(4.21. 既시행) 및 신청요건(기준) 완화 검토 추진*
 - *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화비율(특정재료비 완화(10→7%) 등) 추후결정
- (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납품단가에 적정수준 반영

6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폐업시 직권말소 허용)

- (기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와 동시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필요
- (개선) 사업자등록 말소 시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직권말소 처리*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리·판매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 직권말소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 「의료기기법」 개정(안) 마련('21.上)
-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체 불편 해소

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시 영업신고증 첨부
 - *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등
- (개선) 신고사항 변경신청 시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영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완료('21.3)
- (효과) 영업신고증 재발급 비용 절감 등 업체부담 완화

8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 (기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비해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정기지도·점검 관련 규제가 과도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기 지도·점검 횟수(현행) >

구분	임시보관시설 보유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건설폐기물	2~4회/년	1~3회/년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	2~4회/년	2~4회/년

- (개선)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기지도·점검 횟수 완화
 - 임시보관시설 未보유 시 年 2~4회 → 1~3회(단, 지정폐기물은 2~4회)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개정('21.下)
- (효과) 폐기물 처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업체부담 완화

9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기준) 가축분뇨업은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이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 여부로 규정되어 타법*(통상 1년)에 비해 과도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 (개선)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 조정(최근 2년 → 1년)
*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22.上)
- (효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및 업체부담 완화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 (기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설치·관리규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태료·고발 등) 등에 대한 업계애로 제기
- (개선)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령적용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불합리한 벌칙정비 등 추진*
* 가축분뇨법의 준수율 및 실효성 제고,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 용역 진행중('20.7월 ~ '21.10월, 환경부) → 「가축분뇨법」 개정('22.下)
- (효과) 가축분뇨 업계의 행정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11 화학물질 관련 늦은 사전신고제·국외제조자 선임자 제도 활성화

- (기준) 기존화학물질 등록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늦은 사전신고 제도*와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제** 운영중
* 새로이 기존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에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 국외제조·생산자의 선임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등록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자는 수입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
- 그러나, 兩 제도의 업무 절차, 방법 등 안내 부족으로 현장애로 호소
- (개선)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의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업무 절차, 방법 등의 제도 안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활용도 제고
* (늦은 사전신고) 가능한 경우, 방법 등 안내 ** (선임자 제도) 선임 업무 매뉴얼 배포
- (효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혼선 최소화 및 행정 부담 완화

◇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지원,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기업의 미래대비 지원**

1.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① 탄소중립 이행 지원

- (필요성)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에너지·산업 등 핵심 분야 전략 수립 예정('21.4/4)
 - * 국책 연구 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1월)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 중
 - 산업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우려
- (조치사항)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소외된 업종, 기업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도록 지원 계획
 - *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이행점검 등('21.5.29일 출범)
- ①(금융) 녹색금융TF* 에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포함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 * (정부) 금융위·환경부·기재부·산업부, (유관기관) 금감원, 한은, 정책·민관 금융기관 등
- ②(재정) 기후대응기금 재원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저감사업, R&D 등 지원 검토('22년 예산안 반영)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21.3.3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① (투자 규모 확대) 정부 선제('21)1.59조→향후 확대) + 민간 견인(뉴딜펀드 20조 등)
- ② (핵심 투자 분야 설정) 탄소 감축 효과, 산업 여건 등 고려 → 10대 분야* 설정
 - * ①재생에너지 / ②수소경제 / ③전력 네트워크 고도화 / ④친환경 자동차 / ⑤수요 관리 및 고효율화 / ⑥산업 공정 혁신 / ⑦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 ⑧청정 연료 및 자원 순환 / ⑨핵융합 / ⑩적응 및 흡수
- ③ (민간주도 여건 조성) 민관 합동 기술기획위 운영,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검토, 기업 매칭 부담 완화, 소·부·장 방식 지원(출연연·대학 연구 인프라 결집), 규제특구
 - * 20~40%(신성장·원천기술 분야)

②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필요성)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

○ (조치사항)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중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 공제율 대폭 상향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①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

②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대비 3~4%p 상향

①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핵심전략기술	30~40		40~50

②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핵심전략기술	6	8	16	4

2.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 (기존) 선박검사는 선박검사원의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진행

✓(사례) 드론, 무인로봇 및 무인잠수정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무인 선박검사기법에 대한 수요 증가

* 사람이 직접 살피기 어려운 선체의 높은 부분이나 배 바닥 등을 드론이나 무인로봇 등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 확인

- (개선) 선박검사에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원격검사장비 활용 선박검사 지침' 마련
 - 드론, 무인 로봇 및 무인 잠수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기술의 도입 및 현장적용을 위한 검사지침 제정·시행('21.5)
- (효과) 첨단기술 활용시 ①검사시간 단축, ②비용절감, ③검사 위험도 감소 및 ④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분야 창출

②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 (기존)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토대로 설정되어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검사장비·기구* 의무 구비요구
 -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의 경우 해당 검사장비·기구 등록기준 제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1.8)
- (효과) 전기자동차 정비업체 시설부담 완화 및 정비업체 확산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활성화 기대

3.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①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 (기존) 학원건물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각각 허용중이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 (개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학원 등 건축물내에 입지 허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2년)
- (효과)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 합리화

②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 (기존)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함께 세분업종* 추가시 별도의 업종 변경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 미용업 세분업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등
- (개선) 미용업 지위승계 및 업종변경을 1회의 신고절차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下)
-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경감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변경 승인 절차 개선

-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비치서류(구인·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시 적정 서식 판단 곤란, 사전승인 절차 존재 등 애로 호소
- (개선) 구인·구직신청서 上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하고, 해당 항목 포함시 승인 없이 서식 변경·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추진('21.3. 의원입법 발의) → 법안 개정 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
- (효과) 서식 변경 및 사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인·구직 활동 활성화

4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 (기존) 대기 분야 등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은 법정교육 필수 이수 대상*이나 초과수요**로 인해 교육이수 법정기한 도과 불가피
 - * 최초로 고용된 자이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자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실시 전문교육 이수 필요
 - ** 전국적 경쟁에 따라 법정교육 신청 첫날(1월 중순) 당해 교육과정 대부분이 마감
- (개선)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법정교육 횟수('20년(8회)→'21(11회)), 교육기수당 인원 확대(30명 → 100명이상) 및 비대면 교육 추진(21.4~)
- (효과) 법정 교육수요 정체를 해소하여 측정대행업체 인력수급 개선

5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 (기존) 유색 페트병(PET) 사용금지, 라벨 탈착방식 개선 등 페트병 재활용을 유도중이나 리사이클 제품 생산은 저조
 - *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라벨 탈착 방식 등 규정(자원 재활용법 既개정, '19.12월)
- (개선) 재활용지원금 추가지급*,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품 생산 활성화 장려
 - * 투명페트병 별도 반입·관리 선별업체에 추가 재활용지원금 지급('20.12월~)
 - ** 식약처 고시개정('21.5)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21.12)
- (효과) 자원 재활용 촉진 및 리사이클 제품생산업 활성화

6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 (기존) 건물외벽 청소·도색작업 등에 사용되는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흡하여 작업자 사고위험 상존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 (개선) 달비계 종류별 안전조치 규정을 명확화·세분화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1.12월)
- (효과) 달비계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재사고사망자 감축

IV. 향후 추진계획

□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견 수렴

- 부총리-경제5단체장 정례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여 기업의 요구사항 수렴
- 경제계의 요구사항 및 최근 경제지표 흐름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6월중 발표 예정)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해소 지속 추진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통해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既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 '21년중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 마련 → 경제 중대본 회의(또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일정안('21년, 잠정) >

시기	상정 안건(안)
8월	○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IV
10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기업 규제·애로 해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X)
12월	○ 창업·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X)

☞ 시장과의 지속 소통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참고1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코로나19 부담 경감】		
1.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21.5월	질병청
2.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21.4월	식약처
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21.12월	금융위
4.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22년	고용부
5.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21.7월	고용부
【기업 경영 효율화】		
1.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21.6월	기재부, 고용부
2.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21.6월	금융위
3. 반기업 정서 완화	'21.6월	기재부
【중소기업 부담 경감】		
1.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21.6월	중기부
2.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21.12월	산업부
3.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활성화	'21.7월	기재부
4.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21.7월	기재부
5.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21.4월	중기부
6.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21.6월	식약처
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21.3월	식약처
8.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21.12월	환경부
9.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22.6월	환경부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22.12월	환경부
11. 화학물질 늦은 사전신고제도 활성화	'21.2월	환경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1. 탄소중립 이행 지원	'21.6	기재부
2.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21.9	기재부
【신산업 · 신기술 활성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21.5월	해수부
2.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21.8월	국토부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22년	교육부
2.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21.12월	복지부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21.12월	고용부
4.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 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21.4월	환경부
5.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21.12월	환경부
6.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21.12월	고용부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코로나19 부담 완화】			
1. 기업인 해외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욱 과장 043-719-8370	이지아 연구관 043-719-8375
2.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노혜원 과장 043-719-3784	이훈 사무관 043-719-3785
3.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시행 연기	금융위 기업회계팀	송병관 과장 02-2100-2690	차영호 사무관 02-2100-2692
4.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정해영 과장 044-202-7157	오지영 사무관 044-202-7145
5.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	엄대섭 과장 044-202-7347	천춘희 사무관 044-202-7359
【기업 경영 효율화】			
1.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	오기남 과장 044-215-5530	이희한 사무관 044-215-5531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최관병 과장 044-202-7587	김영수 사무관 044-202-7602
2.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금융위 자본시장과	변제호 과장 02-2100-2650	류성재 사무관 02-2100-2652
3. 반기업 정서 완화	기재부 경제교육홍보팀	오현경 팀장 044-215-2550	황규식 사무관 044-215-2551
【중소기업 부담 경감】			
1.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정기환 과장 042-481-1661	김건영 사무관 042-481-1664
2.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 통상과	김범수 과장 044-203-5710	하정욱 사무관 044-203-5713
3.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개선	기재부 공공계약심사팀	정기철 과장 044-215-5230	이원재 사무관 044-215-5642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4.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기재부 계약정책과	손창범 과장 044-215-5210	김윤 사무관 044-215-5213
5.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노형석 과장 042-481-1667	김남기 주무관 042-481-8966
6.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이남희 과장 043-719-3752	정재용 사무관 043-719-3762
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 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손영욱 과장 043-719-2451	최은진 주무관 043-719-2454
8.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문제원 과장 044-201-7360	최연기 주무관 044-201-7366
9.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조석훈 과장 044-201-7001	권민혁 사무관 044-201-7005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조석훈 과장 044-201-7001	권민혁 사무관 044-201-7005
11. 화학물질 늦은 사전신고 제도·국외제조자 선임자 제도 활성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영석 과장 044-201-6770	박상철 사무관 044-201-6783
【2050 탄소중립·GVC 재편 대응】			
1. 탄소중립 이행 지원	기재부 탄소중립전략팀	정여진 과장 044-215-4976	김재원 사무관 044-215-4974
2. 핵심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 조세제도특례과	배정훈 과장 044-215-4130	강효석 사무관 044-201-4132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최종욱 과장 044-200-5830	박형영 사무관 044-200-5831
2.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체등록 기준 마련	국토부 자동차운행보험과	김은정 과장 044-201-3855	배한후 사무관 044-201-3858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 규제 합리화	교육부 학원정책팀	이현미 팀장 044-203-6218	김 진 사무관 044-203-6380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2.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복지부 생활보건TF	변효순 팀장 044-202-2840	손기정 사무관 044-202-2859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태호 과장 044-202-7327	황현태 사무관 044-202-7333
4.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 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이정미 과장 044-201-6660	김시홍 주무관 044-201-6672
5.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서영태 과장 044-201-7380	유용호 사무관 044-201-7386
6.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박종일 과장 044-202-7722	윤병민 사무관 044-202-7725